연구총서 06-19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조 한 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19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조 한 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28일
발 행 2006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 총서 ; 06-19)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87-3 93340 : ₩5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6002908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분단체제와 남남갈등 ····· 7
1. 분단체제의 근대화와 냉전문화 ····· 9
2. 친미·반공문화와 반문화의 형성 ····· 14

Ⅲ. 남남갈등의 변화추이 ····· 19

Ⅳ. 분단국 사례 : 독일의 내적갈등과 시민교육 ····· 29

Ⅴ. 남남갈등 해소방안 ····· 35
1. '성찰적 통일' 관점의 적용 ····· 37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해석 ····· 41
3. 갈등해소형 통일교육의 지향 ····· 54
4. '통일국민협약'의 체결 ····· 67
5. 사회적 관용의 확산 ····· 71
6. 냉전문화 해체와 평화문화의 지향 ····· 73

VI. 결 론 ····· 79

참고문헌 ····· 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85

표 목 차

<표 Ⅴ-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45
<표 Ⅴ-2> 공동체 형성 단계 ····· 47

I

서 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상징하듯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남북한 주민간의 일상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일도 더 이상 소수 선별된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북핵위기와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냉전기에 비할 수 없는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이견과 갈등은 남북관계발전과 정비례하여 현재화 하고 있다. 퍼주기 논쟁속의 대북지원이 상징하듯 남북관계는 정쟁화의 구도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보혁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북정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초래함과 아울러 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와 통일을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은 분단체제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이룩한 발전의 과정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전후의 신생 독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부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사회의 발전은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을 대치하게 만들었으며, 서로 상이한 방식의 근대화를 선택하게 했다.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냉전적 대립속에서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철저하게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독재와 전체주의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 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속에서 종종 정당한 요구들이 배제되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성장지상주의 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남한사회의 근대화는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 기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남한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은 무엇보다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의 정상화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적 양상을 보여 왔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는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와 부동산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점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내성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과정과 아울러 경험한 또 하나의 현상은 남남갈등 혹은 보혁갈등이라 부르는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구조의 현재

화이다.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 강정구 교수 사건 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의 갈등은 상반된 이념적 성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주한미군 지위변경 및 한·미관계, FTA 협상, 심지어 호주제 문제 등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은 점차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 개선과 아울러 냉전문화구조에 기인한 대내적 갈등구조가 현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 갈등구조는 정치지형에 반영되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민족문제의 정쟁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차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양상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내적 통일 인프라구축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다. 이를 위해 분단의 영향 및 대내적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범 국민적 차원에서 갈등구조의 해소 및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남남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Ⅱ

분단체제와 남남갈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분단체제의 근대화와 냉전문화

남남갈등에 대한 광의의 개념적 정의는 "남한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 내부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제 형태들, 예를 들어 자본과 노동관계, 성차별,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남"이라는 개념은 "남북"에 대한 대칭적 표현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따라서 남남갈등은 기본적으로 남북갈등을 전제로 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구조가 남한사회 내에서 재생산되는 구조 및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견과 대립구조가 남남갈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의미에서 남남갈등은 남북관계 또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러나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은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한국의 시민사회를 지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전한 시민사회의 내적 특성들이 남남갈등의 현재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남갈등은 남북관계와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대미관, 양극화, 성차별, 지역주의, 등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남한사회의 갈등구조와 분단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1] "남남갈등은 남북갈등에 대칭하는 의미로 주조된 용어로써 남한사회내의 갈등의 일반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갈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남남갈등진단 및 해소방안』(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4), p. 5; "남남갈등은 통일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궁극적 목표, 현실인식, 접근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이념적 갈등양상이라 할 수 있다." 조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pp. 3~4.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을 둘러싼 대립구조는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문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분단이라는 구조적 특성은 남한사회내의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영 간의 대립은 남북관계의 이슈를 넘어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한국사회 발전과정의 특성을 내재한 보혁구조 및 진영간 대립은 한국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형성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그 주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남남갈등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된 냉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50여년 이상을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속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냉전적 대립구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포용과 이해의 과정이 아닌 '배제와 강요'라는 배타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남북 간의 관계는 장기간 갈등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관계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부의 냉전문화로 재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냉전적 대립은 차이와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적 관용이 자리 잡은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내었으며, 냉전의 한 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는 '강제적 동질화'의 과정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냉전문화는 바로 배제와 강요를 내용으로 하는 이 강제적 동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냉전문화 속에서는 사회내의 차이와 다양성들이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냉전문화는 분단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근대화과정의 성격규명에 있어 핵

심적이라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관계는 남북한 사회내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방식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방식의 근대화가 남북한에서 시도되었으며,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제약성은 남북한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했다. 그 결과 북한은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한 위기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구축한 남한사회도 이와 같은 분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은 남한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권위주의 정권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압축적 고도성장 전략을 채택했다. 오랫동안 남한사회는 반공체제하의 발전을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는 억압되어 왔다. 남한사회 내에 온존되어 있는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점에서 중층적 의미를 지니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분단이 남북한의 근대화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적 고찰과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관점의 적용은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이후 남과 북은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이질화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일은 정치, 경제 등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상에서 나타난 이질화의 영향은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사회성원들이 상이한 생활세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사회화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신념체계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화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대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주체적으로 세속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신의 가치에서 해방되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신의 가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적 가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인간적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조화로운 합일의 추구보다는 종종 어느 한편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화의 여정이 둘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사회주의는 평등을 자신들의 근대화의 여정에 있어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다. 그리고 두 체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간의 조화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반쪽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두 체제간의 냉전적 대립은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외적인 기제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해 왔다.

현실 사회주의는 이미 체제로서 생명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근대화를 완성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실패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굳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를 들지 않더라도 근대의 의미를 인정하는 진영에서도 '성찰적 근대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시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발견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가치의 조화로운 합일을 통한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 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은 자유를 만끽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 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종교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성의 해방과정으로 전제할 경우 사회주의는 자기방식을 통한 근대화의 한 경로를 걸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경험한 근대화는 두 가지 경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핵심적 테마로 한 자본주의적 근대화는 베버의 표현을 빌리면 수단목적합리성을 강화시켜온 측면이 있다. 반면 평등을 테마로 한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공동체라는 가치합리성에 핵심적 의미를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테마를 주제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근대인'을 탄생시키게 되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는 단순한 상호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의 문제는 단절된 교류와 접촉의 재개라는 단기적 수단을 넘어 분단으로 인해 이질

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간의 통합과 이를 통한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통합과 동일한 생활세계를 바탕으로 의식 및 행동체계가 확립되어야 달성되는 장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질화의 극복은 이와 같은 단절과 고립의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통일과정에 있어 남북 교류는 '첫 발걸음'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분단은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와 각각의 체제 내에 상이한 이질적 요소를 증가시킨다. 이는 흔히 말하는 냉전문화로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이질화의 해소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달성은 남북 양자관계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대북포용정책의 실시와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남한사회 내부의 남남갈등구조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형성해온 자체내 냉전문화의 해소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내적기반, 즉 대내적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 사회문화적 통합상태의 달성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2. 친미·반공문화와 반문화의 형성

냉전적 대립구조 속에서 남한은 반공을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후원자는 미국이었다. 따라서 남한에 있어서 친미·반공은 '기본적 가치'에 해당했다. 장기간 이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될 수 없었다. 이는 이념적 대립의 한 축

이자 최전선에 선 남한사회로서는 강요된 선택이었을 수 있다.

분단체제의 등장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질서재편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남북한의 내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분단은 식민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신생 국가로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남북한에 공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한의 내부구조에서 재생산 되었으며, 냉전문화는 냉전구조의 내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은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역내 질서재편과 연관된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북한 및 사회주의권과의 대립구조로서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체제를 탄생시켰으며, 남한사회내의 친미주의와 강력한 반공문화의 형성을 의미했다. 이는 동시에 그 대립 축에 있는 북한에 대한 반북주의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의 결속력은 강화되었고, 반공문화 역시 강력한 통제기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의 형성은 친구로서 '미국'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적'으로서 북한의 의미를 강조하는 강화기제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냉전체제의 강화에 따라서 '친미·반공'은 남한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았다.

반공주의를 핵심축으로 하는 냉전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정당성의 결여'라는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

장이라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친미·반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를 효율적인 통제기제로 활용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친미·반공'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남한사회의 금기영역이었다. 이는 종종 정치적 반대세력 및 저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색깔시비의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소재였다.

세계적인 냉전체제를 바탕으로 반공문화가 지배하는 냉전구도 속에서 남한사회 내부에는 장기간 진보성향의 정치세력 형성이 억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구조가 형성되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정당구조는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구조를 형성했다. 따라서 정당간의 차이는 정책적 차이라기보다는 주로 상징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역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공메커니즘의 활용은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반공주의는 종종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적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과 같은 시장에서의 이익추구행위나 민중문화 같은 문화적 다원성의 추구는 체제저항적인 이념행위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공안기구들은 반공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의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할당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남한의 적화를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에 의해 남한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종종 정권안보의 수호를 위해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친미·반공문화에 대한 반문화로서 반미·민족주의적 정서의 확산의 토양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친미·반공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이와 같은 반문화의 형성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미·민족주의적 반문화의 형성은 저항적 성격을 띠고,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나갔다. 반미·민족주의적 반문화는 종종 친미·반공문화를 표방하는 정치적 독재에 대한 직접적 비판과 저항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따라서 정권과 충돌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친미·반공문화와 반미·민족주의적 반문화는 대화와 타협의 관계가 아닌 구조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적 지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다양성이 용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배문화의 일방적 주입은 필연적으로 저항적·공격적 성격의 반문화를 형성했으며, 이 둘 간의 관계는 배제와 강요의 특성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늘날 남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충돌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차이'들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평화적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공존의 방식으로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차이들은 곧 바로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영 간의 대립으로 비화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정치권,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효율적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영 간의 대립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관용'은 시민사회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관용의 확산과 일상화를 억제했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이분법적으로 재편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외교안보적 이슈와 북한문제에 대해서 여론 역시 양극화될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는 소모적 정쟁의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아울러 정책의 추진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양극화와 정치권과 정부, 여론주도세력의 대처능력의 한계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지향하는 구체적 노력 역시 이와 같은 내적인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이 없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및 정책은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해서는 외교안보적 노력과 아울러 동시에 남한사회에 뿌리 깊게 구조화되어 있는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III

남남갈등의 변화추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회적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소되는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공존방식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은 인간의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다. 적대감, 전쟁, 경쟁, 긴장, 모순, 투쟁, 불합의, 불일치, 논쟁, 폭력, 반대, 혁명 등은 모두 갈등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2] 갈등은 계급과 조직 등 집단적인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양상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싸움이 개인간의 갈등이라면, 혁명은 사회계급들간의 갈등형태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갈등은 부정적 기능과 아울러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탈냉전은 생활세계의 근본적 지각변동과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갈등의 여지가 증가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남남갈등이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분단체제에서 비롯된 냉전의 유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단은 다양한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분단체제는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 양 진영을 형성시켰으며, 이들은 남북문제의 전반적 이슈에서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북핵실험

---

[2] J.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3). p. 218.

[3] 아래의 기사는 남북관계 변화와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둘로 쪼개진 광복 60주년 기념 '8·15'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를 가진 15일 시민단체들은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갖고, 서로 다른 주장과 색깔이 다른 구호를 외쳐댔다. 서로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두 진영의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 같은 날 대학로, 광화문, 서울역에서 토해내는 이들의 180도 상반된 주장과 집단시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조선일보』, 2005년 8월 16일.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진영의 상이한 태도는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4]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대립과 이에 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의 전개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켜왔으며, 이는 친미주의적 정서 및 문화를 남한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친 남북한 간의 극단적 대립은 친미정서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 및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금기시 되었으며, 친북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친미주의의 형성과정은 동시에 반미주의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성의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권위주의 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를 정권안보에 활용함으로써 반미주의는 남한의 민주화운동세력들에 있어서 주요한 운동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과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신군부와 미국은 민주화운동 제 세력의 동일한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정부체제하에서 '반미주의'적 인식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은밀한 저항문화의 형태로 형성, 발전되는 경로를 거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평화적 대화와 인식의 교류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반미주의가 극적이고 저항적인 방식으로 표

[4] 북핵실험 직후 보수진영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의 안보 불감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진영인 통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강요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12일.

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이었다. 80년대 초의 미 문화원방화사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친구로서의 미국'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요구였다.

친미와 반공주의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한사회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구사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과정은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에 복합적인 의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동서진영간의 대립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국제관계는 이념이 아니라 실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반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한·미관계 역시 이념적 동질성에 기반한 과거의 동맹관계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상황 속에서 부시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및 여중생사망사건 등 일련의 과정은 남한사회의 대미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친구로서의 미국'과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도식에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5] 따라서 남한

[5]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 이전인 93년에 한국갤럽이 '향후 한국의 안보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나라'를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44%), 일본(15%), 중국(4%)에 이어 미국은 1%에 불과했었다. 당시엔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인 72%였다. 그러나 2003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우리나라의 평화에 위협적인가'란 물음에 김정일 위원장(42%)이란 응답과 아울러 부시 대통령(38%)도 유사하게 나와 대미인식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2004년 1월 초 리서치앤리서치의 전화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란 질문에 미국(39%)이란 응답이 북한(33%)보다 더 많게 나왔으며, 중국(12%), 일본(8%) 순이었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12일.

에서는 미국에 비해 북한정권의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은 높아지고 있다.[6] 그러나 반미적 정서의 확산은 아직 구조화된 상태라고는 할 수는 없으며,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형성되는 단초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7]

기아상황에까지 다다른 북한의 위기구조 심화는 북한이 더 이상 체제경쟁대상이 아니며, 지원의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제경쟁이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역시 대립을 지양하고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내적인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남한사회의 냉전문화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는 관성을 지니며, 이는 종종 과거의

---

6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한국과 미국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조사에서 북한정권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위험한 대상'이란 응답이 호주(79%)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미국(77%), 독일(77%), 영국(71%), 캐나다(70%)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69%로 여섯 번째에 머물렀다. 반면 남한사회의 한국인의 3명 중 2명(76%)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가 71%에 달했다. 평화 유지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55%)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2003년 8월 31일.

7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7%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으며, 중국이 6.1%로 뒤를 이었다. 또한 반미감정의 증폭의 원인으로 '주한미군범죄'(24.2%), '미국의 자국이기주의'(16.4%), '불공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12.7%),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및 외교통상 마찰'(10.6%) 등으로 과거에 비해 미국에 대해 현실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여론조사』, 2006년 3월 19일.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역사의 평범한 상식이다. 냉전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를 양극화시켰다는 점이다. 냉전문화는 문화적 다원성과 이념적 포용성의 형성을 극단적으로 억제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에 중첩되어 투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거부가 사회의 지배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한·미관계, 이라크파병 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론의 양극화와 보혁 간의 극단적 의견의 대립은 냉전문화의 영향에 의한 구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8] 이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일방적 친미와 반미는 한국의 현대사 및 분단사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니나, 양자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친미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남한에게 생존을 위한 '강요된 선택'의 의미를 지녔으며, 반미 역시 친미적 독재정권에 대한 '우회적 저항의 담론'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 친미와 반미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부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상황에서 현실적 합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미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적 인식이 필요함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이슈를 통해 재생산되는 양

---

[8] 2003년 8월 MBC 조사의 경우 국내 보수-진보 진영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9.1%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편가름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로는 정치인을 꼽은 사람이 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혁갈등의 심각성과 정치권에서 주요한 정쟁화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사에서 응답자 자신의 경우 34.3%가 '중도', 28.8%가 '진보', 27.5%가 '보수'라고 응답,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2003년 8월 8일.

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지원은 남남갈등의 대표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남남갈등상황에서 추진되는 대북정책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지원에 있어서 등장한 상시적 문제점의 하나는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적 요인이었다. 즉 대북지원의 목표의 설정과 추진에 있어 '효율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치적 판단이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북지원의 효율성 증대의 차원이 아니라 정쟁화의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직후 발표된 대북지원의 중단,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조치, 북한수해에 따른 대북지원의 재개의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상황이 벌어지자 즉각적으로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 역시 곧 바로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의 거부를 논거로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쌀과 비료는 '먹고 사는 문제'이며, 이산가족 상봉은 '혈육의 문제'라는 점에서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없는 인도적 문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를 대북지원과 연계한 것이나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대응한 것 모두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대북지원의 전개과정에서 보수진영으로부터 끊임없는 '퍼주기' 공세와 대북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온 남한 정부가 중도진영의 여론마저 비판적으로 바꾸어 놓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국

제사회와 남한내 여론 양자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중단을 선언한 대북지원의 내용이 쌀과 비료라는 인도적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의 근본적 성격인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 그리고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와도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상황에서 국제적 대북압박기조의 확산과 국내여론의 악화상황에서 남한의 정부는 가시적 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단을 선택,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 남북관계라는 '틈새'를 스스로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부의 선택은 가시적이면서도 보다 신중한 것이어야 했다. 무엇보다 쌀과 비료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과 금강산에서 상업적 남북교류가 지속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중단을 가시적 조치로 활용할 경우 '대북인도적 지원'과 구분하는 선택이 더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공업자재에 대한 논의의 중단, 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대북지원이나 행사의 중단 등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 북한측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주체가 남한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한 정부의 선택은 대북지원과 대북정책에 있어 남한사회 및 정치권의 끊임없는 정쟁화 구도속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지원,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은 남한사회의 정쟁화 구도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반적 과정은 남한 내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대북

정책 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관계 개선과정에 있어 핵심적이며,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냉전문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비판적인 여론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정당정치에서 증폭, 재현되는 순환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쟁의 소지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Ⅳ

분단국 사례
: 독일의 내적갈등과 시민교육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분단체제를 경험한 국가인 서독의 경우도 내적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내적갈등을 해소하는 구체적 노력이 시민사회의 완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체제를 통해서 시도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남남갈등은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비정상적 발전에서 비롯된 만큼 시민사회의 자기완성적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을 분단으로 인한 근대화의 왜곡을 극복하는 정상성의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시민사회교육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분단의 왜곡된 영향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노력이 없이 국민적 합의기반의 강화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독일의 대 시민 정치교육체계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역시 신동방정책과정에서 브란트 총리가 탄핵의 대상이 될 정도로 진영 간의 갈등구조를 경험했다. 독일 역시 분단체제에서 이념갈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독특한 시민사회교육체제를 수립, 상당부분 이를 완화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으나, 이는 독일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승전국가들인 연합군은 독일이 다시 나찌즘과 같은 민족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을 방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고안해냈다. 타율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역설적으로 현 시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점까지 독일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시민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이는 나찌즘이 독일을 지배하게 된 간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종전 후 미국의 주도하에 서독인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

었으며, 이는 학교교육제도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독일 시민교육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평생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시민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에서 학교 체계 밖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치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Bonn)에 전국 정치 교육 센터(National Center of Political Education: Bundeszentrale politische Bildung)는 독일 내무부가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립적인 정치성향을 천명하는 기관이다. 통독 이전까지 본 센터의 핵심적 임무는 전체주의를 포함하는 독일의 과거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 센터이외에 독일의 16개 연방주마다 연방 주립 정치교육 센터 (Federal State Centers of Political Education)를 두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각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민대학(Volkshochschulen: VHS)도 중요한 성인대상의 정치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독일의 모든 도시들이 자체적인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민대학의 교과 과정이나 강의에 있어서 관련 정치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외에도 교회나 노조, 사용자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관련된 기관과 교육 센터들도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재단들 역시 독일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독일 내에는 5개의 정치재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독일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치교육을 시행해 왔다. 사회민주당과 연계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은 가장 오래된 재단으로 192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은 1964년, 바바리아(Bavaria)의 기독교 사회주의 연맹(Christian

Social Union: CSU)과 관련된 한즈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은 1967년, 진보적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은 1958년에, 그리고 독일 녹색당(German Green Party)을 지지하는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ull Foundation)은 녹색당이 독일 의회 내 의석을 차지한 이후인 1988년에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 재단은 구동독 여당의 후신인 '민주 사회주의당'(PDS)의 노선을 따르는 재단이다. 이 정치재단들은 조직 및 재정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념적으로는 특정 정당과 친화력을 보인다. 각 재단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액수는 그 재단과 연계된 정당의 의석과 비례한다. 이와 같은 정치재단의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재단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감대가 독일사회에 형성되어 있다.[9]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의 탈냉전적 시민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교육의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정치교육은 정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10]

---

[9] Ronald Meinardus, "시민 교육 증진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재단의 역할: 독일의 사례,"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한국 시민 단체협의회·미국 전국 민주지원 재단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999.12.14~15).

[10] "낙천·낙선 운동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 교육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특히 보수 세력들이 겁내는 정치교육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폭발력이다. 30년 전 독일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Ronald Meinardus, "독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교육의 도전," 『권위주의 문화속의 교육과 시민운동』, 한독 교육학회 세미나 (2000.5.27).

V

남남갈등 해소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성찰적 통일’ 관점의 적용

남남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출발점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적 관점의 견지라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영향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자체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한의 궁극적 공동체 형성은 제도상의 외형적 통일을 넘어 생활세계의 실질적 통합이라는 본질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회에 있어서 이상적 통합상태는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세대, 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 중의 상당수는 이익집단화하여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합개념의 적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종분리정책을 폐기하기 이전 남아공화국은 흑백간의 단절로 인한 이질적 사회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분단국 간의 통일과 사회통합의 경우 동질적인 민족이 일정기간 상이한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한 체제상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달성한다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통일은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남북통일의 완성은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통일을 위한 남한시민사회 자체의 문제는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통합은 남과 북의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은 통일을 위한 과정과 통일이후를 관통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괄적 노력을 포함한다. 특히 남한 내의 남남갈등과 보혁갈등을 목도하면서 냉전문화의 영향과 통일을 위한 내적 합의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새로운 강조점이 필요하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을 대치하게 만들었으며,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근대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었다.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극단적 대립구도 하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냉전적 대립 속에서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철저하게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의 민족동질성회복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미래지향적·확대발전적 관점의 적용이다. 분단은 남북한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이전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족동질성회복'은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래적·과정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실패한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불완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적 목표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와 재편이 아닌 남북한

사회 자체 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남북한의 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완성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과 북의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남한사회자체의 기반형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IMF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문화의 정상화과정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와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남과 북 자체 내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하는 미래적, 과정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은 남북한에 공히 왜곡된 근대화를 강요해 왔다. 남한은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로서 전망을 가지지 못한 북한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실패는 남한의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근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남한 역시 왜곡된 근대화를 정상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북한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방식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낳을 뿐이다. 남북한의 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

과정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시제는 과거로의 회귀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다. 그것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정상화 노력을 포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의 화해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의 과정은 복합적이고도 지난한 과정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드컵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희망은 정당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민통합의 노력 및 정책대안의 마련과 연계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 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바,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통일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한국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위한 과제 역시,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북한을 포용하는 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냉전문화와 분단문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통일문제는 시민사회를 주체로 한 성찰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해석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현실적합성을 가진 통일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골격과 방향성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 변화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통일과정의 복합적 측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룩해 놓은 통일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역대정부가 발전시켜온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며, 참여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시기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김영삼 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으로 발전시킨 것이다.[1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건설을 목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12]

1단계인 화해·협력기는 남북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류·협력을

---

[11]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이룩해 놓은 통일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서울: 통일부, 2005), p. 13.

[12] 위의 책, pp. 15~16; 통일부,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pp. 44~48.

확대함으로써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남북한이 상호간의 체제 인정을 통해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단계의 주요한 목표인 화해와 협력의 심화는 평화의 제도화 및 통일에 대한 과도적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2단계인 남북연합기는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전제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 및 민족공동생활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구체적 기구들을 설치하게 된다. 사실상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형태를 유지하지만,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상정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의 주요 과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의 형성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추진이 가능한 시기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연합기에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완성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사회문화 분야에서 통일의 기초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인 통일국가의 완성은 남북연합기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한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1민족 1국가체제로의 형성을 의미한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국가의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되며, 따라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일이 달성되는 단계로 상정되어 있다.

3단계로 이루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형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남북연합이 형성될 경우 사실상 통일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현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된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대북정책은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지리·주권의 통합이 완성되는 통일이 가능한 상황의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남북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통일상황의 추구는 남북한의 장기적 이질화가 진행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적대적 갈등관계를 형성해온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가 단기간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이 상이한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형성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의 사실상의 통일상황은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상황

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류·협력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협력관계가 설정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남북한 간의 적대감 해소와 동질화과정의 급속한 진전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살상의 통일상황은 남북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적 특성은 우선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통일과정을 전제로 화해·협력과정을 통한 실질적 통일기반의 확충과 남북연합을 통한 사실상 통일의 완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적 과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의 <표 Ⅴ-1>로 요약될 수 있다.[13]

[13] 통일부,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2002.5), <http://www.unikorea.go.kr/>.

<표 Ⅴ-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o 통일의 철학 : 자유민주주의
o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통일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

o 통일의 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협력
·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어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나,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과도체제를 설정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
  ①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남북평의회(대의기구/남북 동수 대표)
  ④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o 통일국가의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구체화 되면서 통일과정으로서 공동체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14]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민족공동체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는 "비정치 분야 위주의 공동체인 경제·

사회·문화공동체와 정치·이념분야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사회문화,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주목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로 규정되고,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인 통일실현(민족공동체 형성의 바탕위에 통일국가를 이루는 실질적인 통일)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의 완성을 포함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여건조성을 위해 비정치분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에 따라서 통일과정으로서 공동체 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공동체가 통일의 '한 단계'이자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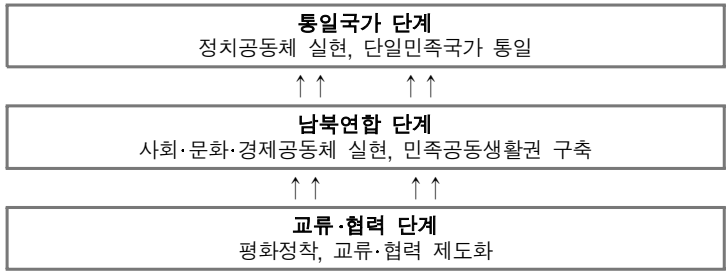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족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방법으로는 비정치적인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와 정치,

---

[14]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3.
[15] 위의 책, pp. 3~4.

이념적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해야 하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이며,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국가통일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최종적 형태가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공동체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와 이념공동체의 실현이전이라도 민족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을 유보할 수 없으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16] 이는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될 수 있다.[17]

<표 Ⅴ-2> 공동체 형성 단계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방향도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기존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증진과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에 주안점을

[16] 위의 책, pp. 3~4.
[17]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63.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각 단계별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나. 통일방안에 대한 성찰적 관점의 적용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추진주체들의 역량과 내부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없이 지난한 통일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은 남남갈등과 같은 내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할 것이다.

우선 통일단계의 구분의 적용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식적 통일이 완성되는 3단계의 통일국가단계는 통일과정이 아니라 통일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과도기로서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와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단계는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라는 기준으로 상호구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3단계의 경우 통일의 준비과정으로서는 사실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의 준비단계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로 구별될 수 있으며, 현 단계는 남북한 사회·문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완성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남북연합기를 준비하는 화해·협력기이다.

공동체란 내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통합 상태를 의미하며, 차이들이 구조적인 차별로 재생산되지 않으며 차이들이 공동체내의 일상적 생활 및 공동목표달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내의 민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상상된 정치공동체로 상정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앤더슨의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18]라는 정의는 상당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은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나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상호교통(communion)에 의해 상상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족공동체의 정립에 있어 하나의 주권과 민족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내면화시키는 정치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족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총체적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의 민족공동체는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형성이 시작될 수 있으나 단계별로 완성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없다. 따라서

---

[1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p. 21.

남북한 민족공동체는 통일국가형성 이후의 일련의 실질적 통합기를 포함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지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북연합기라는 준비적, 과도적 상태에서 사회문화, 경제공동체의 달성가능성의 문제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이념과 정치통합이 완성되는 국가통일이전의 민족통일로 상정되어 있으며,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 그리고 정치영역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인식하는 기계적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체는 내부구조를 이루는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가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으며, 분야별로 차등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내부구조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관계에 있다. 특히 정치공동체는 공동체가 하나라는 자의식과 '하나를 위한 헌신적 희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치공동체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된 개념으로 각 분야별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기존입장은 정치공동체형성 이전 사회문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분야별 접근을 시도하는 기존의 입장은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한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주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실질적

인 수단으로 인식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간의 동질성 증대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중시 입장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용론적 해석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입장은 서로 독립된 두 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문화구조의 우위가 확인될 때 열등한 사회가 우월한 사회로 동질화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나, 사상의 우월성이 체제간의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문화변용론은 상이한 문화체제가 접촉과정을 통해 일방, 혹은 양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화간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문화의 유사성과 통합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에 입각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의 증대로 해석되는 것이다.[19] 즉 체제간의 접촉과 교류의 증대가 양 사회의 동질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가가 양 체제간의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종국적으로 남북사회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남북 양 체제는 일반적 체제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양 체제는 다른 체제와 다르게 상호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상의 특성을 넘어서 남북한은 동일한 민족적 역사를 공유하나, 분단으로 상대방 존재의 부정을 스스로의 존재의 타당성으로 삼아 왔다.

---

[19]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

즉 단순한 체제간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이며, 이는 각각의 주민들에 대한 내면화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주입되고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체제는 일반적인 체제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합상태의 증대는 단순한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자체적 해소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와 상이한 근대화의 경로를 걸어왔으며,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남북한 사회내의 내면화상태인 냉전문화 역시 공고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동질성 증대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체적 기반의 마련 역시 공동체 형성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구사와 남북관계의 개선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됨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국내적 파급효과와 냉전문화와의 상충,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남남갈등의 부각 및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남

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교류·협력의 증대를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현 통일정책의 기조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을 중심과제로 설정함과 아울러 동시에 상호 이질성을 심화시켜온 체제내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반세기 이상의 적대적 상호공존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양 체제간의 이질성이 일반적인 체제간의 차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각 단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 양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냉전관계의 지속은 양 체제 내의 이질성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는 주민의식의 내면화과정을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 양 체제는 체제간의 교류·협력의 확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과정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적용시킬 경우, 첫 번째 과정인 화해·협력기가 남북 연합기와 남북통일단계에 비해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인 대립관계와 이를 통한 이질성의 심화과정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준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용시킬 경우 화해·협력기는 남북연합 및 통일단계에 선행하는 단계이자, 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대립관계의 청산과 화해·협력적 관계의 형성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적인 체제간의 상호수렴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화해·협력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어 화해·협력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화해·협력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남북연합기는 사실상 통일을 위한 남북한 간의 공식적 합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3단계인 통일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기적 과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연합기가 일종의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절차적 의미만을 지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합의는 양 체제간의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차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지속기간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 장기적인 화해·협력기와 비교적 단기간의 남북 연합기, 그리고 이 과정에 이어진 통일단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화해·협력기에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해석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과제는 단순한 남북관계 진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양 체제 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문제들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갈등해소형 통일교육의 지향

가. 갈등해소를 위한 통일인프라의 필요성

남남갈등은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된 기원과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처방으로 해소되기 어려우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일인프라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관계는 대립구조에서 화해협력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와 같은 기본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혹은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남남 갈등, 통일기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적 장애요인들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변화에 따라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는 지형을 초래했다. 정부 역시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냉전적 사고로 평가절하함으로써 비판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경직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냉전구조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타협적 구도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구조의 형성은 대북정책 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 야당과 협력구도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정쟁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의 마련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 합의기반 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추진구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문제들로 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돌파구의 마련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대북정책 추진의 합의기반구축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남한내부의 갈등요소들이 증폭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근본적 제약요인인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정책이 진행되어야 했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내적인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이 없이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의 냉전적 대립은 남북양자에 냉전적 질서와 제도를 형성시켰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다. 남한사회의 보안법논쟁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대내적 합의기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내적인프라 구축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더불어 대내적 통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한사회 내부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역량의 강화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통일인프라 구축이라는 문제로 개념화될 수 있다.

통일인프라 구축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뒷받침할 남한사회 내부의 역량강화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되는 통일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일대비능력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다. 통일인프라는 대북정책 추진 및 통일과정으로의 이행을 위한 제반차원의 국내적 기반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갈등해소형 통일교육의 방향성

(1) 근대화의 정상화

분단은 남북한에 상이한 체제를 형성시켰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와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폐쇄적인 명령경제를 운용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강압적인 타율적 통제를 가하여 개인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집단적 특성을 강조했다. 분단으로 인한 상호 적대적 관계는 남한사회의 전개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안보와 체제경쟁에서의 승리가 사활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2차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는 개발독재형 산업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 와해와 북한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증대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과정은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아울러 본격화된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오가고,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남한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변화

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는 관성을 지니며, 종종 과거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역사의 평범한 상식이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그 기원이 형성된 남한사회의 통일교육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는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남북한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해 왔다. 극단적 대립구도 속에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타협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긍정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상황에서 남한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반공이라는 구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한의 통일교육은 '공존'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정신무장에 가까웠다. 문제는 항상 '적'으로서의 북한이었으며, 우리 스스로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튼튼한 정신무장을 해야만 했다. 이는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 대립과 이후의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여야 했던 남한 사회가 당면했던 상황적 조건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적 상황에서의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생성된 '내 안의 장애'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성찰적일 수 없었다. 분단과 남북한 간의 극단적 대립은 남북한 모두의 발전과 근대화에 일정한 장애로 작용했다. 기아상황에까지 다다른 사회주의 북한의 현실과, 냉전문화의 벽에 의해 양극화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오늘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일교육은 분단의 왜곡을 교정하고 민족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한 '발전의 기형성'

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주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 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의 자유를 만끽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 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상이한 테마를 주제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근대인'을 탄생시키게 되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는 단순한 상호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의 문제는 단절된 교류와 접촉의 재개라는 단기적 수단을 넘어 분단으로 인해 이질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간의 통합과, 이를 통한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은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와 각각의 체제 내에 상이한 이질적 요소를 증가시킨다. 이는 흔히 말하는 냉전문화로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이질화의 해소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상태의 달성은 남북 양자관계차원의 교류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와 아울러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남한사회 내부의 남남갈등구조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형성해온 냉전문화의 해소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내적 기반, 즉 대내적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 사회문화적 통합상태의 달성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미래지향적·확대발전적 관점의 적용이다. 분단은 남북한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이전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족동질성회복'은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미래적·과정적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실패한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불완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적 목표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와 재편이 아닌 남북한사회 자체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기본적 방향성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상황은 남한사회의 근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냉전문화로 생활세계에서 재생산되어온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노력이 없이 근대화의 정상성회복과 시민사회의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확대된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즉, 냉전으로 인한 근대화의 비정상성을 해소하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중요 방법론으로서 통일교육이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시민사회교육의 확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통일을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성의 회복이라는 성찰적 관점을 견지할 경우, 통일교육은 보다 거시적인 시민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시민사회의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한 근대화의 모순은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 따르지 못했던 남한사회의 시민성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시민성의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시민사회교육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행위주체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통일이후 북한주민들도 사회주의의 전통주의적 특성에서 벗어나 시장체제의 근대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교육의 강화는 장기적인 통일교육의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현 통일교육의 기본골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교육이 보다 거시적인 시민사회교육의 하부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을 분단으로 인한 근대화의 왜곡을 극복하는 정상성의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통일교육은 시민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독일의 대 시민 정치교육체계는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통합지향형 통일교육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 원인은 상호 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에 있으며, 이는 남북주민간의 장기적인 교류와 접촉의 단절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고립은 결과적으로 상이한 생활세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질화의 극복은 이와 같은 단절과 고립의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과 단절로 인해 발생한 이질화는 단기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해소되기 어려우며 반대로 상호 몰이해로 인한 긴장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안점은 차이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들은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구조적인 특성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생존한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는 사회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장기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북한사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특수한 경험을 재생산해온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결과물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며, 일정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형성한 부정적 특성들은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상이한 체제로의 변화는 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북한이 남한과 다른 사회적 과정을 경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냉전 논리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단기적인 청산의식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북한 주민들에게 고유한 또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만들게 된다.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은 제도적인 외형상의 통합을 넘어서 사회의 내재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다양한 분열적 요소를 잠재시킨 겉으로의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보다 여건이 좋았던 독일의 경우도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사회적 거리감이 사회통합에 있어서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호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전체주의적 영향들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사회적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그릇된 편견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남한 사회내의 보혁 간의 대립이 갈등구조로 증폭되는 현실에서 남북한간 차이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차이의 인정과 관용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은 통일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 양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구조 해소를 포함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탈냉전형 통일교육지원체제의 구축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해체는 한국사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제도와 문화의 관성은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기원을 형성하고 있는 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관성간의 마찰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남갈등의 기원이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전체제하의 통일교육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성격을 지향하기보다는 국민윤리차원의 이념교육의 특성을 지녔다. 통일교육 차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반공 및 안보교육이라는 국가적 캠페인의 하부구조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자율적 프로그램이 마련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일교육은 국가안보라는 상위체계를 위한 하부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안보교육체계의 일부분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일교육은 안보교육과 소수 선발인원에 대한 방북교육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체제는 냉전의 해체와 남북화해시대의 도래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안보교육체제의 관성과 함께 통합되지 않은 학교교육 및 취약한 국민교육체제, 교육전문가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점이 그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교육수요의 급증상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및 지원체계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비단 학교교육과 시민사회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 문화 등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특히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적 조건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 지원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의 제시와 이를 토대로 한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통일전문교육 실시 등 보다 체계화된 통일교육지원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안보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장교육도 점차 통일을 대비하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시민 통일교육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관련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종합시스템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통일교육원을 직접교육기관에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교육지원센터 등을 설립, 통일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일정책대학원의 설립 등 통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사전대비체제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의 소외계층에 대한 통일정책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대체로 통일문제 인식에 있어서 남성 계층보다 보수적이고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지만, 청소년 계층보다는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계층의 특성을 감안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 바,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종교 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업주부들을 위한 여성들의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여성통일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통일의식의 약화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통일의식의 현실화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청소년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청소년의 통일의식 약화는 통일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직접적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는 적극적 통일교육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매체 활용도를 고려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전용 포털사이트에 통일코너 등 간접적 교육효과를 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단체를 통한 특성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은 통일관련 단체에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의 방송프로그램들은 '보는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여형 통일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토록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주입식 학교통일교육체계를 개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통일국민협약'[20]의 체결

남북관계 개선의 전반적 과정은 남한 내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대북정책 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관계 개선과정에 있어 핵심적이며,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 냉전문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과 아울러 비판적인 여론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정당정치에서 증폭, 재현되는 순환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쟁의 소지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은 남남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영역으로 민

[20] 통일국민협약의 개념은 사회협약(social pact)의 개념을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협약은 노동과 자본관계의 제도화와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코포라티즘의 전통에서 생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협약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97년 IMF위기 때였다. 경제위기라는 당면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동과 자본을 동참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통일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핵심이 민족문제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하는 사회협약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강명세 편,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서울: 세종연구소, 1999).

족문제 정쟁화라는 소모적 재생산 구조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퍼주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이후 대북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북개발지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관계 개선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와 같은 민족문제 정쟁화의 재생산 구조는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합의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특성상 일방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족문제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를 통해 정쟁화의 소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보혁갈등과 정치구조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세력도 추진력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하기 힘들다.

여론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북핵 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예상가능한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통일문제를 민족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의를 통한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치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며, 통일문제는 민족모두의 안위와 미래와 직결되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국민협약'이 필요하다.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지양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에 대한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불이용' 및 '민족차원의 정책추진 원칙'을 대 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협약을 통

해 분파적 이익에 따라 민족공통의 안위를 좌우할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협약은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합의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21]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각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 분야의 경우 여·야간 협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협력의지를 대 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이를 국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 국민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구들을 설치, 운영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여·야 간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상시적·초당적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여·야간 정책적 협력구도를 정착, 활용함으로써 대북정책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대 국민설득체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득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특성상 대북·통일문제에 대해 일사불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족문제의 정쟁화의 소지를 줄이는 최소한의 합의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민간단체 역시 냉전문화라는 분

[21] 이과 같은 점에서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단의 유제 해소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구조 형성, 그리고 나아가 정상적 시민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22]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이에 대한 공격적 반응, 그리고 보혁 진영간의 배타적 대립구도의 형성보다는 시민사회내의 의사소통구조를 개선시키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3]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구도의 본질적 문제는 이견의 존재보다는 이견을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장의 마련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시민사회 스스로 이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합의구조의 형성은 국민참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될 수 없는 '상당한 비용'(북한개발지원형 대북지원)을 수반하게 될 것인 바, 대국민 홍보를 넘어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국민참여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표성이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구도를 강화하고, 국민제안 등 일반시민들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조치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문제는 객관적 정답의

---

[22]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 구축방안』(통일연구원, 2004). pp. 64~75.

[23]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하는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ies)는 대북지원을 포함하는 민족문제 전체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적 중요성에 있어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대화민주주의는 동의의 획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자체를 통해서 공적신뢰와 공존의 가능성 마련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통일논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치유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봉쇄한 채 이념적 대립의 강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현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지형에 있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는 노력 자체가, 보혁 양진영 스스로의 극단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지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 박찬욱 역, 『제3의 길』(서울: 생각의나무, 2001)

모색이 아니라, 통일의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5. 사회적 관용의 확산

냉전문화는 극단적 이념대립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잉태하며,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전쟁문화의 요소들을 내제한다. 따라서 냉전문화에 대한 반 개념은 평화문화의 성격을 띠며, 이는 근본적으로 상호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냉전문화의 해소는 분열과 갈등과 배타성을 해소하는 성찰적 노력을 통해 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통일노력은 한국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며, 상호공존하는 토양을 만드는 노력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똘레랑스의 문화'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24] '지탱한다' 혹은 '감수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tolerare에서 유래한 똘레랑스(tolerance) 는 16세기 초에 등장한 개념으로, 구교와 신교사이에서 발생한 종교 대립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25] 서구에서 똘레랑스의 개념이 정착된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일이며, 이후 그 의미를 확장하여 현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똘레랑스의 현대적 의미는

---

[24] 헨드릭 빌렘 반 룬 저, 김희숙 정보라 역,『똘레랑스』(서울: 길, 2000); 사시에 필리프 저, 홍세화 역,『왜 똘레랑스인가?』(서울: 상형문자, 2001)

[25] 따라서 비국교도들(침례파, 감리파 등의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신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줄 목적으로 1689년에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관용법(Toleration Act)과 로마카톨릭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신성로마제국황제 요제프 2세가 1781년에 공포한 법률인 관용령(Toleranzpatent) 등이 똘레랑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신념이나 사고, 행위가 나와 다를 때 나의 주장을 여타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로 '관용'으로 번역되며,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 들이거나 용서함'이다.[26] 똘레랑스와 반대되는 개념인 앵똘레랑스(intolerance)는 타인에게 나의 신념이나 행위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요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따라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에서 60여년간 유지된 분단과 냉전적 상황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강요를 일상생활의 방식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적 사고를 일반화시켜 왔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논의 자체가 이념적 차이를 기본으로 하는 배타적 대립구도에 의해 표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똘레랑스의 문화 즉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똘레랑스 문화의 정착을 통해 한국사회내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타파하고, 다양성이 용인되는 공존의 장으로서 사회를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적 개념인 똘레랑스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의 한국적 맥락을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사회적 차원에서 '똘레랑스 코리아'(가칭) 운동의 전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한사회내의 성찰적

---

[26] 남영신 엮음, 『국어사전』, (서울: 성안당, 1997), p. 217.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보편화되어있던 동양사회의 '관용'의 개념과 서구 계몽주의사상과 자유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똘레랑스는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동양의 관용은 자비, 혹은 사면, 아량과 의미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나와 타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서구 자유주의사조 속에서 발전된 똘레랑스는 나와 타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상호존중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노력을 통한 스스로의 화해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스로의 성찰과 아울러 상대를 관용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똘레랑스 코리아'(가칭) 운동은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하여 스스로 냉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 속에서, 냉전문화의 청산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와 아울러 실천의지의 확산을 의미한다. 냉전적 대립구조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요와 배제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형성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는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 관성으로 남한사회는 탈냉전적 상황에서 이념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슈마다 첨예한 대립이 재생산되는 구조는 강요와 배제라는 냉전문화의 논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요와 배제보다는 차이가 인정되는 '공존의 문화'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치권과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냉전문화 해체와 평화문화의 지향

분단구조는 이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한다. 남한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 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를 지녔으며, 탈 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보혁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전문화가 남북한 간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냉전문화의 해체와 정상문화로의 회귀는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혁 간의 차이와 편가르기가 아니라 보혁 간의 정상적인 공존관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진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방식 역시 흑백논리차원의 청산방식이 아닌 공존의 논리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는 보혁간 갈등구조의 해소는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나, 기존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수구적 발상으로 치부하는 태도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발전과 그 결과들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기영역이었던 다양한 냉전의 유제들에 대해 공론화와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수,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구현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지형과 사회적 인내의 형성을 위한 기초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대립적 대화단절의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열린 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열린 공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27]

냉전문화의 해체는 일방적 청산의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냉전구조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냉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을 형성했다. 남한사회의 보수와 진보진영은 각자 스스로를 냉전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부분 오히려 스스로를 문제해결의 배타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은 한반도의 전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민족'이란 종교에 버금가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일제의 강점과 이에 이은 분단, 통일염원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

---

[27]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통일과 사회·문화통합』(홈볼트 대학 Hans Meyer 총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9.18), pp. 33~34.

와 문화의 핵심적 가치이자 거부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사적 조건이었다. 특히 분단구조에 의해 통일이 민족적 과제로 설정됨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모든 진영에서 수용해야할 가치로 생존해 왔다. 이는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양 진영 모두 민족주의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듯이 민족주의는 극단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시민사회의 경계성을 필요로 한다. 이미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나찌즘과 군국주의, 그리고 최근 유고슬라비아에서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가능성을 목도했다. 따라서 서구의 시민사회에서 '민족적'(national)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서독이 분단이전 시행한 정치교육과정에서 '통일'이나, '민족'을 강조한 교육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자기완결성을 추구하는 서독의 노력은 결국 독일통일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민족우선 논리에 빠질 경우 스스로의 내적인 냉전문화를 발견하고 시민사회의 자기완성이라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성찰적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보수와 진보세력 양자는 모두 자기존재에 대한 일정한 근거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 진영을 형성하고 있으며, 냉전문화는 이와 같은 양진영을 '숙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경우 장기간 남한문화의 중심에 서있던 반공과 친미를, 진보진영은 이에 대한 반문화 성격으로 반미, 자주를 중심논리로 설정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진보

진영을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수구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는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핵 및 대북지원과 직접적 통일·북한문제외에도 이라크파병, 주한미군재배치, 보안법폐지추진, 그리고 과거사청산 등 주요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보수와 진보세력의 비타협적 대립구도가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냉전문화의 해체는 성찰적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인정이나 일방적 청산의 시도는 상대진영의 단결을 도와줄 뿐이다. 따라서 냉전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유도하는 '전 사회적 성찰'을 통한 냉전문화의 해소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적인 과정을 맺고 살아가는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그리고 사회의 내부에는 그것을 계급 혹은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회집단과 서로 다른 이념체계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이익관계는 상호대립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적일 수도 있다. 사회의 근대화 혹은 선진성의 척도는 차별적인 사회집단들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이들 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의 정도, 사회적인 이동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 간의 타협과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미성숙된 사회일수록 기득권층의 힘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반대로 대다수의 소외집단은 권력과 재부, 사회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정도가 크다.

냉전문화해소의 궁극적 목적은 분단으로 인한 모순과 불합리성들을 개선하는 것이며, 공동의 생활의 장인 사회의 상태를 보다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냉전문화 해소방법의 선택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사회의 전 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점에서 냉전문화 해소의 목표와 방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의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 기득권세력의 불합리한 구질서 온존 시도나, 소수의 전위세력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시행되는 냉전문화 해소시도는 사회발전논리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또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소외시킨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위험성을 지니며, 그 자체로서 냉전문화의 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사회의 냉전문화 해소노력은 단기적인 청산작업을 넘어서 성장지상주의의 길을 걸어온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과정이 야기한 본질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소는 이념적 문제를 넘어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의의 완성,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한 냉전문화 해소노력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Ⅵ

결 론

분단이후 남북한은 50여년 이상을 상호 이질적인 체제에서 존재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냉전적 대립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이질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단국의 사례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단으로 인한 영향은 남북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의 남남갈등의 토대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의 과정은 복합적이고도 지난한 과정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정책의 추진은 국론의 분열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월드컵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희망은 정당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민통합의 노력 및 정책대안의 마련과 연계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한국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추진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배제와 강요라는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민사회의 정상문화의 정착은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이 핵심적 전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남갈등의 해소는 한국사회의 자기성찰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J. H. 터너. 김진균 외 역.『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3.

강명세 편.『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서울: 세종연구소, 1999.

앤서니 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윤덕희·김규륜.『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조한범.『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2004.

통일부.『통일백서 2005』. 서울: 통일부, 2005.

통일연구원.『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헨드릭 빌렘 반 룬 저, 김희숙·정보라 역.『똘레랑스』. 서울: 길, 2000.

사시에 필리프 저, 홍세화 역.『왜 똘레랑스인가?』. 서울: 상형문자, 2001.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윤형숙 옮김.『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2. 논 문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남남갈등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4.

조 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남남갈등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통일관 개관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04.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통일과 사회·문화통합』. 훔볼트 대학 Hans Meyer 총장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3.9.18.

Meinardus, Ronald. “시민 교육 증진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재단의 역할: 독일의 사례.”『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한국 시민 단체협의회·미국 전국 민주지원 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999.12.14~15).

_____. “독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교육의 도전.”『권위주의 문화속의 교육과 시민운동』. 한독 교육학회 세미나 (2000.5.27).

3. 기 타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여론조사』(2006).

통일부.『통일방안에 대한 이해』(2002.5) <http://www.unikorea.go.kr/>.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 취 선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